

수교 25주년,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제성훈** 구마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shjeh@kiep.go.kr, Tel: 044-414-1255)
- **이재영** 구마·유라시아실 선임연구위원
(lji@kiep.go.kr, Tel: 044-414-1089)
- **강부균** 구마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 **윤지현** 구마·유라시아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hyun@kiep.go.kr, Tel: 044-414-1053)

차 례 ●●●

1. 논의 배경
2.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몽 경제협력 추진체계 점검
4.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ODA 전 부문에 걸쳐 확대되어왔으나, 몽골의 성장잠재력과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아직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 양국의 교역액은 2012년 4억 8,710만 달러를 달성하여 1990년대비 140배 이상 증가했으나(2014년 3억 7,039만 달러), 여전히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대(對)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이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4년 3,144만 달러로 증가했고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투자 활성화의 장애요인임.
 - 2012~13년 기준 한국은 對몽골 4위 원조 공여국이며 1991~2013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5위 무상원조 수원국이나, 원조 규모가 작아 산업협력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 후속관리 소홀로 그 효과도 감소하고 있음.
- ▶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제3의 이웃 정책’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양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몽골 등 내륙국들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라시아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대외교역과 투자유치가 제한되어 있는바, 미국, 일본, 한국 등 제3국과의 대외관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3의 이웃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 양국간 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제협력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협력 추진체계 개선 차원**에서 △ 기존 ‘한·몽 자원협력위’를 ‘한·몽 산업자원통상위’로 확대 개편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 개최 △ 민·관 협조체계로서 ‘對몽골 산업자원통상협력 민·관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함.
 - **산업협력 차원**에서 △ 광물가공공장,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 진출 △ 광물자원개발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및 ODA·EDCF와 연계된 도로건설사업 진출 △ 건설 수주 적극 참여 및 연관분야 진출 모색 △ 유기농 농장 및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복수취향을 통한 항공료 인하 △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 △ 중소기업 주도 소규모 제조업 진출 등을 제안함.
 - **자원·에너지협력 차원**에서 △ 전략 광종 및 지역 선정 △ 상류-하류 연계 프로젝트 발굴 △ 중국과의 컨소시엄 구성 △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전력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등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통상협력 차원**에서 △ 자동차(중고차) 수출 증대, 투자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FTA 체결 △ 이를 위한 양국 연구기관의 FTA 공동연구 우선 추진 등을 제안함.

1. 논의 배경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몽골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되고 있음.

- 1990년대 경제체제 전환의 혼란을 극복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성장했던 몽골 경제는 비록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음.
 - 2010년까지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체제전환 초기’(1990~95년),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연평균 4% 성장을 달성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 물가안정과 산업생산 및 대외 무역의 지속적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된 ‘거시경제 안정기’(2000~08년 하반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에 따른 일시적 충격과 급속한 회복을 경험한 ‘경제위기 및 회복기’(2008년 하반기~2010년)로 구분됨.¹⁾
- 2011년 17.5%, 2012년 12.4%, 2013년 11.7%의 고도성장을 거듭했으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4년에는 7.5%(잠정치,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성장에 그쳤음.
- 현재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통해 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 지원을 협의 중임.²⁾
 - 이는 외환보유고 변동 추세로 볼 때 IMF의 지원이 긴요한 것은 아니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2017년 도래하는 대규모 대외채무 상황을 앞두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표 1.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9~14년)

	단 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인구	만 명	271.0	275.5	278.6	284.0	288.2	292.5
명목 GDP	십억 달러	4.6	6.2	8.8	10.3	11.5	11.7
실질 GDP 증가율	%	-1.3	6.4	17.5	12.4	11.7	9.1
1인당 GDP	달러	1,691.7	2,249.5	3,144.5	3,634.9	3,995.6	4,007.8
CPI 상승률	%	6.3	10.2	7.7	15.0	8.6	14.1
경상수지/GDP	%	-8.9	-15.0	-31.5	-32.6	-27.7	-14.1
실업률	%	11.6	9.9	7.7	8.2	10.4	8.8

주: 2014년 수치는 2014년 10월 기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 2014년 기준 몽골의 GDP는 117억 달러, 1인당 GDP는 4,057달러에 불과하지만, 풍부한 광물자원과 넓은 배후시장을 고려할 때, 몽골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석탄, 구리, 금, 은, 연아연, 텅스텐, 우라늄, 몰리브덴, 형석 등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넓은 배후시장도 두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1) 이재영, 이시영, 두게르 간비타르(2010),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pp. 36-4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하지만 2016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다만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교통물류망의 한계와 이로 인한 교역상대국의 제한성, 좁은 내수시장 (인구 약 290만 명), 경제성장에 있어 광물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등이 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4년 기준 중국과의 교역이 수출의 88.6%, 수입의 27%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교역은 수출에서는 1.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수입에서는 27%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광업의 비중이 GDP의 20.2%, 산업총생산의 58.7%에 달하며, 광물자원의 비중이 수출의 89.2%에 달할 정도로 경제성장이 광업생산 및 광물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아태지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동북아와 중앙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양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몽골 등 내륙국들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라시아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³⁾
- 또한 최근 서방의 제재와 저유가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로 유라시아 협력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대외교역과 투자유치가 제한되어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 제3국과의 대외관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3의 이웃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몽골은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하고, 동서로는 동북아, 중앙아와 이어지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확대 및 강화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애물’인 북한과도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서 핵심거점이 될 수 있음.

그림 1. 몽골의 지리적 위치



자료: Wikipedia, "File:Mongolia map projection.png," http://en.wikipedia.org/wiki/File:Mongolia_map_projection.png
(검색일: 2015. 3. 19) 지도를 이용하여 필자 재구성.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문(全文)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2013 Eurasia Initiative -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참고.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15년 한·몽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그 제도적 기반인 양자 경제협력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경제협력 추진방향의 재설정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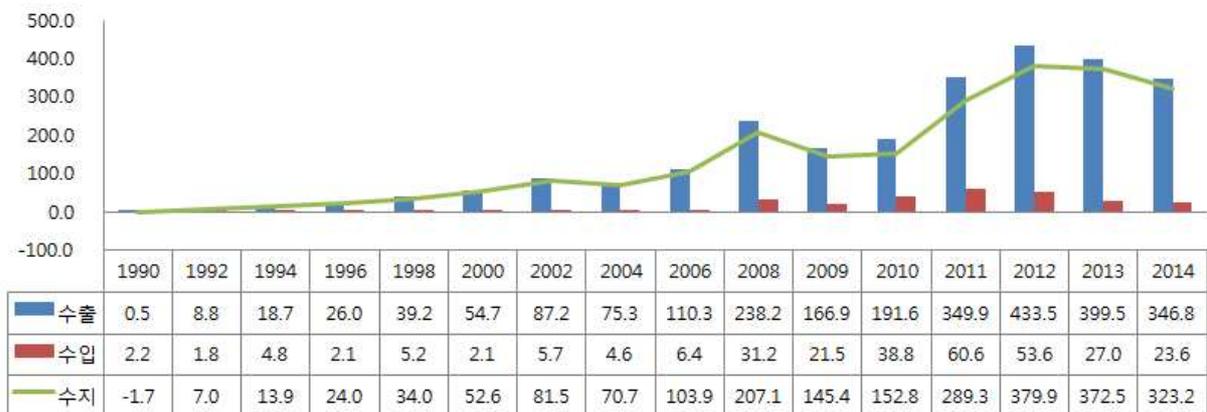
2.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가. 교역

- 한국과 몽골의 교역액은 2012년 4억 8,710만 달러를 달성하여 수교 첫해인 1990년대비 140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4년에는 3억 7,039만 달러를 기록했음(그림 2 참고).
- 2014년 기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몽골의 3위 교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3위)이나, 몽골은 한국의 76위 수출상대국이자 120위 수입상대국에 머무르고 있음.⁴⁾
- 1990년을 제외하고 한국은 몽골과의 교역에서 계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4년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양국간 교역액의 87.3%에 달하는 3억 2,322만 달러임(그림 2 참고).

그림 2. 한국의 對몽골 수출입 현황(1990~20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검색일: 2015. 3. 9)을 기초로 필자 재구성.

-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출품목은 1990년대 초반 직물, 부속품 등 경공업 제품에서 점차 화물차 및 승용차(중고차 위주), 건설 중장비 등으로 변화해왔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직물 등임.

4)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검색일: 2015. 3. 9).

- 그동안 한국의 對몽골 수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 일본이 중고승용차를 대량으로 수출하여 시장점유율을 제고한 것만 보더라도 수출 확대의 여지는 아직 충분함.

■ 양국간 교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몽 FTA,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임.

- 양국간 FTA 체결은 아직 5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투자 촉진, 제도 개선, 기술 협력 등 비교역 분야 협력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음.
- 한편 2015년 2월 10일 몽골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먼저 체결되면서 선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음.
 - 해당 협정은 몽골 최초의 FTA로서 그 의미가 크며, 향후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에서 일본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이 도로건설, 엔지니어링, 전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분야에서 외적 요인에 의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⁵⁾

나. 투자

■ 한국의 對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은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4년 3,144만 달러로 증가했고, 누적 직접투자액은 총 3억 8,361만 달러임(표 2 참고).

- 한국의 직접투자액이 對몽골 총 투자유입액의 2.69%(1990~2013년 9월 기준, 몽골 투자청)에 불과한바, 교역에 비해 한국의 對몽골 투자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업종별로는 1994~2014년 기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업(27.5%)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17.5%), 건설업(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9.4%) 등의 순임(표 3 참고).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45.8%)이 가장 많고, 대기업(36.9%), 개인 및 개인기업(17.3%) 순이며,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 주요 현황은 [표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2. 한국의 對몽골 직접투자 현황(1994~2014년)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1999	23	14	13,647	21	9,002
2000	13	7	5,457	15	2,584
2001	9	5	4,552	14	2,634
2002	13	5	5,715	13	2,884

5) 몽골 산업부 정책기획 전문가 N. Oyundelger 인터뷰 내용(2014. 12. 24), 울란바타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3	11	8	4,567	19	1,337
2004	29	18	7,931	48	3,485
2005	52	25	14,226	104	6,705
2006	52	26	44,129	119	19,703
2007	102	55	50,621	179	44,433
2008	189	78	164,916	261	58,308
2009	114	46	123,017	203	25,512
2010	113	44	58,271	160	26,338
2011	132	52	59,979	171	44,118
2012	130	44	95,998	184	55,910
2013	114	33	59,463	166	49,215
2014	108	44	42,794	140	31,441
합계	1,204	504	755,283	1,817	383,606

주: 2014년 통계는 잠정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검색일: 2015. 3. 9).

표 3. 한국의 對몽골 업종별 투자내역(1994~2014년)

(단위: 천 달러, %)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비중
건설업	136	65	90,776	207	52,783	13.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	2	300	3	30	0.01
광업	234	45	257,717	391	105,605	27.53
교육 서비스업	4	2	170	4	170	0.04
금융 및 보험업	11	7	1,528	13	1,359	0.35
농업, 임업 및 어업	43	11	8,762	67	4,175	1.09
도매 및 소매업	260	128	123,731	336	67,128	17.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	8	33,334	57	18,513	4.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7	42	88,439	223	36,099	9.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17	19,709	66	12,097	3.15
숙박 및 음식점업	15	11	9,457	29	7,144	1.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5	1,520	40	750	0.20
운수업	30	13	15,072	33	11,178	2.9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4	630	5	430	0.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7	39	20,936	77	16,343	4.26
제조업	133	77	35,680	184	20,193	5.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7	16	40,259	54	25,953	6.7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1	4,591	9	2,981	0.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11	2,672	19	676	0.18
합계	1,204	504	755,283	1,817	383,606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3. 9).

표 4.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 주요 현황(2014년 6월 기준)

분야	주요 내용	
광물자원	2013년 기준 총 23개 사업 진행(생산 3건, 개발 6건, 탐사 14건)	
건설 및 인프라	삼성물산	국경지역 철도 건설사업(4.4억 달러), 신공항 건설사업(4.5억 달러), 호텔건설사업 진행 중
	한라건설	초이르-사인산드 도로 건설(2013년 8월 준공)
	일성건설	게르 지역 아파트 389세대 건설(2015년 완공 예정), 600세대 공사 인허가 추진 중
	롯데건설	호텔 건설공사 계약(1억 달러, 공사 지연)
전력 및 에너지	제5석탄열병합발전소	포스코에너지 컨소시엄 수주(2014년 6월)
	석탄액화사업(CTL)	포스코·MCS(지분 50:50) MOU 체결
	탄반톨고이 발전소	입찰 진행 중(포스코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보건의료	연세친선병원, 송도병원, 한방의료원 등 병원 운영	

자료: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http://mng.mofa.go.kr/korean/as/mng/main/index.jsp>(검색일: 2015. 3. 9).

■ 몽골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여전히 한국의 對몽골 투자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기업들은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낮은 노동생산성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쿼터 제한, 불투명한 행정처리 등을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하청업체의 공사기간 미준수, 손실 시 추가비용 요구 등도 큰 애로사항임.
- 또한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과 관련한 몽골 정부와 리오 틴토(Rio Tinto) 간 분쟁으로 인해 몽골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었음.
- 반면 몽골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정부 및 기업의 단기적 이익추구 형태의 접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⁶⁾
- 탄핵으로 물러난 알탄후약 대신 2014년 11월 총리에 취임한 사이한빌레그(Ch. Saikhanbileg)가 정부규제 완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 투자자 불신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향후 투자환경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이한빌레그 총리는 2014년 11월 기업인 대표단 초청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안정화, 국내외 투자자 유치, 비즈니스환경 개선, 민간기업 의견의 국가정책 반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가경제협의회’ 창설을 발표한 바 있음.

다. ODA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對몽골 ODA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2012~13년 기준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對몽골 4위 원조 공여국임.
- 1991~201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對몽골 무상원조액은 총 1억 5,196만 달러로, 해당 기간 몽골은 한국의 무상지원 수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무상원조를 받은 국가임(2013년 기준으로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⁷⁾

6) 몽골 국립대 국제관계학부 J. Battur 인터뷰 내용(2014. 12. 22), 울란바타르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액은 1987~2014년 총 9건, 1억 3,933만 달러로서, 이는 해당 기간 EDCF의 승인 총액 106억 2,142만 달러의 1.5%에 해당함.
- 현재 對몽골 유무상원조는 ‘몽골 국가개발전략(NDS) 2007~2021’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수립된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2015’에 따라 ICT·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업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그동안 무상원조는 주로 산업에너지 및 교육 분야에, 유상원조는 교통통신 분야 및 의료시설 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표 5, 표 6 참고).

표 5. KOICA의 對몽골 분야별 무상원조 현황(2007~13년)

(단위: 천 달러)

분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금액	5,968	11,589	9,919	23,544	26,014	28,528	25,487
	사업건수	11	18	21	20	23	19	28
교육	금액	979	1,184	1,399	2,012	3,634	3,355	6,123
	사업건수	1	1	2	2	4	4	9
보건	금액	423	343	441	554	665	1,026	1,871
	사업건수	2	2	3	3	3	3	4
공공행정	금액	1,494	4,484	2,971	5,363	6,889	5,026	3,774
	사업건수	3	3	4	3	4	2	5
농림수산	금액	1,347	3,144	2,120	2,056	1,008	3,176	1,997
	사업건수	3	8	8	6	5	5	4
산업에너지	금액	463	2,305	2,839	10,302	12,744	14,256	11,468
	사업건수	1	2	3	4	5	3	5
긴급구호	금액	1,179	81	0	123	13	23	254
	사업건수	1	2	0	1	0	0	1
기타	금액	84	49	148	3,134	1,061	1,666	0
	사업건수	0	0	1	1	2	2	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5. 3. 10).

표 6. EDCF의 對몽골 지원 현황(1987~2014년)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승인연도	승인금액
주사기공장 건설사업	1992	5.20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996	8.00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충용자	1999	0.87
정부통신망 현대화사업	1999	5.30
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1999	14.30
고속도로 건설사업(초이르~사인산드 구간)	2004	23.90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2006	12.80
긴급구난정보망 건설사업	2006	13.50
국립의료원 건설사업	2011	55.46
합 계		13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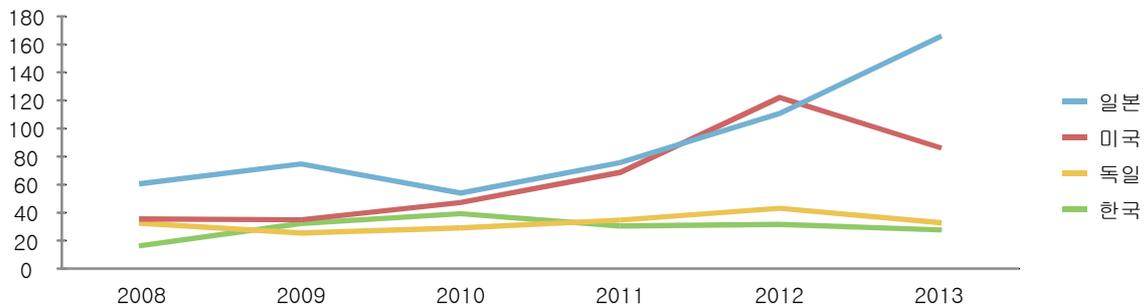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www.edcfkorea.go.kr/edcf/index.jsp>(검색일: 2015. 3. 10).

■ 그러나 한국의 원조 규모가 작아 산업협력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 후속관리 소홀로 그 효과도 감소하고 있음.

- 최근 ODA 민간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발굴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 몽골 원조는 일본,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그림 3 참고),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산업협력과 연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원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면, 몽골 측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견기업은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⁸⁾
-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후속관리가 소홀하여 시설 가동률 및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도 다수임.
 - 이는 과거 한국 측이 사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현재는 성과 유지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설정), 시설 가동 교육 및 고장 시 대처에 소극적인 몽골 측에도 문제가 있음.
- 최근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對몽골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바, 산업협력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ODA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그림 3. 국가별 對몽골 ODA 지원 현황(2008~13년)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양자간	169.4	229.8	232.2	265.0	376.4	367.7
DAC ^{a)}	164.1	214.4	226.2	262.4	363.0	363.8
일본	60.7	74.7	53.9	75.6	110.7	165.2
미국	35.4	34.9	47.2	68.7	122.1	86.6
독일	32.4	25.4	29.1	34.7	43.1	32.9
한국	16.5	32.3	39.2	30.5	31.6	27.7
다자간	57.3	141.7	70.5	85.4	72.4	60.6
합 계	246.7	371.2	302.8	350.6	448.8	428.3

주: a)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전체.

자료: OECD(2014),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p. 187; OECD(2015),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p. 212.

8) KOICA 몽골사무소 최홍렬 소장 인터뷰 내용(2014. 12. 23, 울란바타르).

3. 한·몽 경제협력 추진체계 점검

■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25년간 양자관계 발전과 함께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협력 추진체계를 발전시켜왔음.

- 한·몽 양자관계는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1999년 5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2006년 5월), ‘포괄적 동반자관계’(2011년 8월)로 발전해왔음.
 - 몽골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관계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미국, 인도와는 한국과 동일한 수준인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있음.
-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1999년 11월 체결된 한몽 자원협력협정에 따라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수석대표: 국장급)가 가장 먼저 구성되었고, 이어서 농업, 교육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간 경제협의체가 마련되었음.
- 2014년 8월에는 장관급을 수석대표(한국 측은 차관급)로 하는 ‘한·몽 공동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에 1차 회의 개최를 추진 중임.
 -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 시 양국 정상이 ‘양국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체 설치 필요성에 합의(공동성명 5조)’한 지 3년 만에 구체화되었음.

그림 4. 한·몽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주: *는 정상 공식방문.
자료: 저자 작성.

■ 양국 정부간 경제협의체로 ‘자원협력위원회’, ‘농업협력위원회’,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2011~12년 이후 더 이상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의 공식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원회’는 1999년 12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거의 매년 개최되었으나, 2011년 10월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임.
- 2004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간 농업정책 및 경험 공유, 농업개발지원, 기술교류, 투자확대 등을 논의해온 ‘농업협력위원회’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2012년 7월 5차 회의 이후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10년 9월 1차 회의와 동시에 교육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고, 2012년 3월 2차 회의와 3차 포럼을 개최했음.
- 2001년 9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문화공동위원회’는 4년 후인 2005년 2차 회의, 다시 6년 후인 2011년 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중단된 상황임.

표 7. 한·몽 정부간 경제협의체 현황

협의체	주요 논의내용	최근 개최
공동위원회 (몽골은 장관급, 한국은 차관급)	- 양국간 경험 증진, 통상애로 해소, 자원·에너지 협력 등 ※ 수석대표(2014년 8월 합의 시): (한국) 외교부 제2차관,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 ※ 매년 교차 개최 계획	1차 회의 개최 추진 중
자원협력위원회 (국장급)	- 양국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협력, 공동연구, 산업기술인력 교류 등 ※ 수석대표(10차 회의 기준): (한국)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몽골) 자원 에너지부 연료국장 ※ 1999년 12월 1차 회의 개최 후 거의 매년 교차 개최	11차 회의 2011년 10월 (서울)
농업협력위원회 (국장급)	- 양국간 농업정책 및 경험 공유, 농업개발지원, 기술교류, 투자확대 등 ※ 수석대표(5차 회의 기준):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전략기획정책국장 ※ 2003년 10월 체결한 농업분야 협력약정(MOU)에 따라 2년마다 개최 2004년 3월 1차, 2006년 4월 2차, 2008년 5월 3차, 2010년 6월 4차 회의 개최	5차 회의 2012년 7월 (울란바타르)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교육과학기술포럼 연계, 차관급)	- 양국간 교육·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교류 등 ※ 수석대표(2차 회의 기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 ※ 1995년 체결된 「한·몽 교육협력약정」과 2007년 「한·몽 과학기술 협력협정」에 근거 ※ 2010년 9월 1차 공동위 및 포럼 개최: 교육과학기술공동위는 2년마다 한국과 몽골에서 교차 개최, 교육과학기술 포럼은 매년 교차 개최 ※ 2011년 9월 2차 포럼 개최	2차 공동위 및 3차 포럼 2012년 3월 (서울)
문화공동위원회 (국장급)	- 문화교류, 합작 사업 등 ※ 수석대표(3차 회의 기준): (한국) 외교부 문화외교심의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사무차관 ※ 2001년 2월 바가반디 대통령 방한 시 개최 합의 ※ 2001년 9월 1차 회의, 2005년 5월 2차 회의 개최	3차 회의 2011년 11월 (울란바타르)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몽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한·몽 경제협력위원회’, ‘한·몽 경제포럼’ 등 민간 차원의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음.

- 양국 국회의원들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한·몽 의원친선협회’(한국 측 협회장: 야당 원내대표)는 2009년 6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몽 협력포럼을 구성·출범시켰음.
- 대한상공회의소와 몽골상공회의소는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한·몽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2011년 8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9차 합동회의가 개최되었음.
- 양국간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몽 경제포럼’은 2013년 11월 1차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어서 2014년 8월 2차 포럼을 몽골에서 개최했음.

■ 현지 소재 상주공관은 이러한 경제협력 추진체계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 1990년 6월 울란바타르에 대사관을 개설했고, 몽골은 1991년 2월 서울에 대사관, 2010년 10월 부산에 명예영사관을 개설했음.
- 1992년 9월 울란바타르에 KOICA 몽골사무소가 개소되었고, 2013년 7월에는 KOTRA 울란바타르 무역관이 개관되어 한·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안정적인 제도화가 아직 미흡한바, 정부간 경제협의체의 위상 제고, 효율성 강화방안 모색 등이 요구됨.

- 합의사항의 이행 담보 및 상호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몽 공동위원회,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의 수석대표를 기존 차관급, 국장급에서 장관급,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중·몽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13차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한 바 있음.
 - 일본은 1.5트랙 차원에서 장관급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촉진 및 광물자원개발 공공민간 섹터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6차 회의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했음.
- 또한 정부간 협의만으로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관이 함께 참여하는 양자협력 추진체계 활성화 및 만관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사실상 휴면 상태에 들어간 정부간 경제협의체를 재기동 및 재편하는 것은 물론, 기존 논의·합의 사항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정상회담과 고위급 인사교류도 활성화하여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정책 제언

-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ODA 전 부문에 걸쳐 확대되어왔으나, 몽골의 성장잠재력과 양국간 협력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아직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 양국의 교역액은 2012년 4억 8,710만 달러를 달성하여 1990년대비 140배 이상 증가했으나(2014년 3억 7,039만 달러), 여전히 절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對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이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4년 3,144만 달러로 증가했고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의 열악한 투자환경이 투자 활성화의 장애요인임.
- 2012~13년 기준 한국은 對몽골 4위 원조 공여국이며 1991~2013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5위 무상원조 수원국이나, 원조 규모가 작아 산업협력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 후속관리 소홀로 그 효과도 감소하고 있음.

■ 5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교역규모 증대와 현지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한국기업의 對몽골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추진체계 개선과 중점협력과제 설정이 필요함.

- 기존 한·몽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투자 진출과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정부간 협의체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
- 플랜트, 교통·인프라, 건설, 농·축산업 등 유망산업 분야와 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FTA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인하 또는 철폐, 통관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외국인 고용쿼터 확대,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등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이 △ 양자협력 추진체계 개선 △ 산업·자원·통상 분야 협력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對몽골 경제협력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함.

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체계 개선

■ 기존 대표적인 정부간 경제협약체인 ‘한·몽 자원협력위원회’를 ‘한·몽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함.

- 몽골 정부가 단순한 광물자원개발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심층가공’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하더라도 자원개발에만 집중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는바, 자원개발과 산업 협력의 연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몽골 정부가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바, 자원개발과 산업협력은 물론 통상협력과도 연계 하여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간 경제협약체가 요구됨.
-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양측 수석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 또는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함.
 - 몽골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경제논리에 앞서는 정치논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인바, 정부 대 정부의 비즈니스 협상, 고위급 차원의 협력논의가 보다 효율적임.

■ 2014년 8월 양국 정부가 ‘한·몽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협력채널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협력 추진체계 재편 및 경제협약체간 역할 분담이 불가피함.

- ‘한·몽 공동위원회’와 기존 ‘농업협력위원회’,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또는 이를 확대 개편한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간 역할 및 논의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를 비롯한 기존 위원회를 ‘한·몽 공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 또는 ‘한·몽 공동위원회’는 외교, 인적·문화 교류 등을 담당하고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경제협력 전반을 조정하는 이원화 방안 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시 만관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차원의 ‘한몽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제안함.

- ‘한·몽 비즈니스 포럼’을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정부간 경제협약체의 의제 및 프로젝트 발굴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 또한 양국 기업인간의 정보수요 파악,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 모델 논의 등이 활성화되어 협력 추진체계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민·관 협조체계 구축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간 경제협약체의 의제를 발굴하는 ‘對몽골 산업자원통상협력 만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함.

- ‘민·관 협의회’의 목적은 기업기관 간 현지 정보 공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논의, ODA 연계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및 자금조달 지원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의 의제를 발굴하는 데 있음.
- 정부 부처, 유관기관, 현지 진출 기업, 연구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시기는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산업 분야 협력방안

■ [플랜트 분야] 광물가공공장(구리제련소, 제철소, 정유공장, 석탄가공공장)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 진출이 유망함.

-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구리, 금 등 주요 광물의 ‘심층가공’ 후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몽골 정부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교통·인프라 분야] 광물자원개발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ODA 및 EDCF와 연계된 도로건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몽골 정부는 현재 다양한 교통부문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몽골의 철도건설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울란바타르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시내도로망 정비사업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건설 분야] 호텔, 빌딩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지의 건설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주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 도시개발 활성화로 다시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지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낮은 반면 한국 건설업체들은 이미 풍부한 해외건설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 건설자재 및 인테리어, 내부설비 등 연관분야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축산업 분야] 한국기업의 진출 시 유기농 농장,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이 유망함.

-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에서 식량안보와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몽골은 지구 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청정한 농축산물, 즉 유기농 식료품 및 육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임.
-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내몽골, 동북지방)과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의 고소득층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법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한국기업들은 식료품 가공기술 면에서 중국, 러시아 기업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햄, 소시지 등 고품질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 분야] 한국 관광기업의 협력 투자를 통해 몽골의 관광자원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몽골은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관광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호텔경영 기법의 전수 등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는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서울-울란바타르 노선 항공료 인하임.

■ [금융업 분야] 몽골에서는 아직 금융업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증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몽골 은행들은 업무의 절반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몽골에 한국식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몽골 증권시장 역시 현재 약 90여 개의 현지 증권회사와 약 20여 개의 외국계 증권회사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 IPO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임.

■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주도의 소규모 제조업 진출이 유망함.

- 300만 명 미만의 적은 인구, 급격한 임금상승, 운송인프라 미비, 중국에서 유입되는 저가 상품 등이 제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기는 하나, 현지 광물자원개발 및 건설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제품 생산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 몽골의 캐시미어 제품이 매우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임.

다.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 전략 광종과 지역을 선정하고 정부간 협상을 통해 전략광산개발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몽골은 이미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15개 광산을 선정하여 전략광산으로 지정했으며, 추가로 30개의 전략광산을 지정할 예정임.
- 몽골 정부는 국가지분을 조정하면서 이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아직 국토의 20~25%만 탐사를 수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광산에 대한 한국의 참여 기회는 아직 충분함.
- 몽골의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 전략 광종 및 지역을 선정하고 몽골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석탄 및 석유, 캐나다와 호주는 구리 및 금, 러시아는 우라늄 및 석탄, 미국은 석탄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광산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상류(자원개발)와 하류(자원가공) 부문의 연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야 함.

- 몽골 정부는 2012년 8월 새로운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광물자원을 단순히 원자재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수출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했음.
- 따라서 외국기업들과의 입찰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자원개발 참여와 가공공장 설립을 동시에 제안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석탄개발과 석탄화학공장 건설 연계, 석유개발과 정유공장 건설 연계, 황산개발과 비료공장 연계 등임.

■ 몽골 광물자원의 최대수요자인 중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시도해볼 수 있음.

- 중국은 몽골 광업에 대한 최대투자국이자, 동시에 몽골 광물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수요독점국임.
- 몽골에서 개발한 광물자원을 한국 또는 타국으로 수출할 때도 중국영토 경유가 불가피한바,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몽골 자원개발에 경험이 없는 일본과의 컨소시엄 형성이 타반톨고이 광산개발 참여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석탄공사가 투자한 훗고르 탄광도 중국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음.
-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몽골 자원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중국의 對몽골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신도시 및 광산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 기존 발전소 노후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몽골의 전력 에너지 분야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몽골에는 총 1,000MW의 발전용량을 가진 5개의 전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약 210MW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수요 대비 공급능력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임.
- 오유틀고이, 타반톨고이 개발계획 등에 따라 남고비 지역에 향후 1,300MW의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정부와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되, 양국 정부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전력 에너지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몽골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BOT(Build-Own-Transfer), 또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 몽골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협상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 큰 리스크인바, 양국 정부간 차원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라. 통상 분야 협력방안

■ 몽골의 잠재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의 거점 조성 차원에서 한몽 FTA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와 중앙아 사이, 각기 다른 유라시아 협력 구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서 핵심거점이 될 수 있음.
- 일본이 몽골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고 교역량이 약 3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EPA를 체결한 이유 역시 몽골의 잠재적·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임.
- 내륙국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외교역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현될 경우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임.
- 우선적으로 한·몽 FTA의 주요 현안 및 파급효과에 대한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함.

■ 한·몽 FTA 체결 시 자동차(중고차) 수출 증대, 투자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관세인하 또는 철폐 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 건설 중장비,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와 주요 수입품인 금속비금속 광물 등의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양국간 교역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인접국인 러시아, 중국에 비해 물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인바, FTA 체결 시 이것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어야 함.
 - 현재는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 상품이 중국 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상황임.
- 현재 몽골의 중고차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일본이 EPA 체결을 통해 중고차 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몽 FTA 체결 시 한국 중고차도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표 8. 한·몽골 경제협력 강화방안

협력체계 개선	양자협력 추진체계	- '한·몽 자원협력위원회'를 '한·몽 산업자원통상협력위원회'로 확대·개선 - 한·몽 비즈니스 포럼 개최
	민·관 협조체계	- 對몽골 산업자원통상협력 민·관 협의회 설립
산업·자원·통상 분야 협력강화	산업 분야	- 플랜트, 교통인프라, 건설 등에 중점 ○ 광물 가공공장, 원자력발전소 건설분야 진출 ○ 광물자원개발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및 ODA·EDCF와 연계된 도로건설사업 진출 ○ 건설 수주 적극 참여 및 연관분야 진출 모색 - 농·축산업, 관광산업, 금융업,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유기농 농장 및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및 복수취향을 통한 항공료 인하 ○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 ○ 중소기업 주도 소규모 제조업 진출
	자원·에너지 분야	- 전략 광종 및 지역 선정을 통한 전략광산 개발 참여 추진 - 상류(자원개발)와 하류(자원가공) 연계 프로젝트 적극 발굴 - 중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 정부와 전력구매계약을 전제로 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통상 분야	- 자동차(중고차) 수출 증대, 투자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FTA 체결 - 한·몽FTA 협상을 대비한 양국 연구기관간 주요 현안 및 파급효과 공동연구

자료: 저자 작성.

- 외국인 고용쿼터 확대(또는 투자액 대비 고용쿼터 적용) 및 고용세 면제, 법인 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합의 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몽골 정부는 매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쿼터를 발표하고 외국인 고용 시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고용세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까닭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 또는 제3국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북한의 경우 고용세 면제). **KIEP**